제주도민 "내년 예산 투자 1순위 환경 분야"

131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회복지·보건-안전 뒤이어
재정 전망 부정적… 긴축 시 "행사성 경비 감축" 의견 많아

제주도민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가장 우선 투자해야 할 분야로 '환경'을 꼽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1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환경 분야에 가장 우선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16.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복지·보건 12.8% ▷안전 12.4% ▷교육 11.7% ▷산업·기업·에너지 11.5% ▷교통·물류 11.4% ▷농림·해양수산 7.0% ▷문화·체육·관광 6.7% ▷일반행정 5.8% ▷국토·지역개발 4.4% 순이었다.

환경과 사회복지·보건, 안전 등 내년도 예산 투자 우선 순위 상위 3개 분야는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에서는 녹지공간 확충 및 생태계 보전사업에 가장 우선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26.8%를 차지하며 1순위로 꼽혔고, 2순위는 24.9%를 기록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사업'이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출산·아동 보육지원 사업'(38.2%)이, 안전 분야에서는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39.1%)가 각각 1순위로 꼽혔다.

제주도민들은 내년도 재정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재정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2.5%가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32.3%였다.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출 효율화가 52.9%로 가장 높았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 확충은 30.3%로 뒤를 이었다.

또 긴축 재정이 불가피할 경우 감축해야 할 항목으로는 '행사·축제성 경비'를 꼽은 응답이 3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민간보조금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27.6%로 비교적 비중이 높았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은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번째 본예산"이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늘어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 속도 내야"
한동훈 의원 '실증 성과 기업 육성·산업화 연결' 주문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가 관련 실증사업을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육성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제주지역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4만9300여 대로 이는 도내 전체 운행 차량의 11%를 차지하는 규모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도내에서 회수되는 사용후 배터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80건이 회수 됐는데, 2025년에는 287건이 회수되며 6년 만에 3.5배 이상 늘었다. 올 들어서도 8월 31일 기준 277건이 회수됐다. 매각 실적 역시 증가세다. 2024년 211대였던 매각 물량은 2025년 442대로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도내에서 회수되는 사용후 배터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제주의 신산업과 기업 육성으로 연결하기 위한 연관 사업 생태계 조성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동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표선면)은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앞으로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 의원은 제주도가 그동안 추진한 사용후 배터리 관련 실증사업과 연결해 가로등 ESS(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한 의원은 "가로등을 설치할 때 전선이 있는 곳은 쉽게 설치할 수 있지만 전력 인프라가 없는 곳은 투자비가 많이 들어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가로등 ESS라고 보는데, 지난해 50대가 보급된 가로등 ESS가 올해는 별도의 보급계획이 잡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은 "현재 보급계획이 잡히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사용후 배터리가 회수돼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독감 예방접종 준비 이상 무 인플루엔자(독감)가 예년보다 이르게 유행하고 있는 1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독감 백신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 연령·대상별로 순차 시작된다. 연합뉴스

도, 제주형 기본사회 도민 의견 접수… 11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30일까지도 누리집에서 위성곤 지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형 기본사회는 소득·일자리,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노동, 문화 등 7대 기본서비스를 제주 지역 특성에 맞게 보장하는 정책이다.

제주도는 의견 수렴 기간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 지원이나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 새롭게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제안받는다.

제주도는 접수한 의견을 태도로 담당 부서 검토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주형 기본사회의 정책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활용한다. 이상민기자

윤리교육에서

임신과 출산 사이 '분만'의 공백

강 정 범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5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한 산모가 소방헬기에 올랐다. 태어날 아이를 받아줄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향해야 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때로는 이런 현실과 마주하는 일이 되고 있다.

202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응급분만 이송은 모두 346건이다. 이 가운데 34건은 소방헬기를 이용해 도외 의료기관으로 향했다. 이송 사유 절반 가량은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이었다. 최근 제주 전체 분만의 28%를 담당해 온 산부인과가 27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의료기관 한 곳의 폐원이 제주 전체의 분만 공백 우려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제주 분만의료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그동안 저출생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임신을 지원하고, 산후조리와 보육·돌봄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그 사이 정작 한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인 '분만'을 위한 기반은 얼마나 세심히 살펴왔는가?

섬이라 더 절박한 분만의료
제주형 지원 방안 찾아야
안전한 출산, 지역사회 책임

특히 섬인 제주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절박하다. 다른 지역에서는 인접 도시 병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제주에서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 분만부터 고위험 산모와 위급한 신생아까지 제주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단순한 의료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오는 2027년 제주대병원에 권역모자의료센터가 문을 연다. 산모·태아 집중치료실이 마련되고 현재 16병상인 신생아중환자실도 20병상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산모, 태아, 신생아를 제주 안에서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변화다.

그러나 병상이 늘어난다는 사실만으로 그동안 반복된 도외 이송문제가 해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도외 이송의 주요 사유가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이었던 만큼 추가 확충 이후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필요한 의료인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제는 출산정책에서 분만을 더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산전 진료에서 일반분만과 고위험분만, 응급 이송, 출산 후 신생아 집중치료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동시에 24시간 분만을 지키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의 인력과 운영 부담을 지역필수의료의 문제로 바라보고, 제주에 맞는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 타 지역에서는 이미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순회진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분만 기반을 지키고 있다.

아이를 낳을 것인지는 한 가족의 선택이다. 그러나 그 선택 이후 안전하게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임이다. 저출생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지 더 많은 출산을 권하는 일이 아니다. 임신한 순간부터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까지, 제주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만드는 일이다. 새 도정이 지금 답해야 할 질문은 하나다. 헬기가 뜨는 이유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